

## ‘日 독도 도발’ 성난 대한민국

### 정부, 전 부처 동원 강경 대응... 정치권 ‘독도수호특위’ 구성

#### 정상회담 발언 싸고 대립 격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둘러싼 한일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국 정부가 전 부처를 동원,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강화에 나서고 정치권도 ‘독도수호특위’를 구성하는 등 강경 대응하는데 맞서 일본 정부도 내년부터 독도에 대한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일전 불사의 기류마저 흐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회담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교묘하게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일본에 대한 국내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15일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전방위적인 대응과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서 등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을 대내외에 알렸다.  
청와대도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훗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 정상회의 도중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고 ‘일본 사회과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

금은 끈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결론적으로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 측 언론플레이의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후쿠다 총리의 발언 성격을 감안할 때 “독도 영유권 명기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관련 일본 외무성도 이날 이같은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고다마 가즈오(児玉和夫) 외무성 보도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

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정상회담 논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삼가고 싶으나, 보도된 것과 같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부의 대일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경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정치권도 강경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일본의 중등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독도 수호 및 역사 왜곡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일본에 항의 방문단을 파견키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출판제 첫 날 광주 동구청 주차장 ‘한산’ 공공기관 차량 ‘출판제’ 시행 첫 날인 15일 차량 16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90여대 차량만이 주차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각 기관에서도 사전 홍보 덕분에 뜻밖에도 출판제 운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다. > 관련기사 7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호텔 등 인프라 크게 부족

## 외국인 관광객 ‘최하위’

#### 관광공사 실태 조사

광주·전남지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특히 광주·전남지역 방문 외국 관광객은 남이섬, 대장금 테마파크, 에버랜드 등 특정 관광지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관광 인프라 구축과 홍보 등 전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2007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후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과 인천·부산항을 통해 출국한 외국인 1만1천4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을 방문한 외국인은 광주 1.7%, 전남 1.7% 등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지역(중복 응답 포함)은 서울이 73.4%로 가장 많았고, 경기 26.4%, 인천 19.1%, 부산 18.8%, 강원 16.6%, 제주 13.8% 등 순이었으며, 광주·전남은 각

각 1.7%로 경남과 함께 12위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으로 전북(1.2%), 충북(0.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업 목적 등을 제외한 순수 관광만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광주·전남을 찾은 이들은 1.5%에 불과했다.  
16개 시·도별 분류가 아닌 ‘한국 관광 중 방문지’만을 따졌을 경우 서울 73.4%, 부산 18.8%, 제주 13.8%, 민속촌 11.6%, 에버랜드 10.2%, 판문점 7.5%, 경주 6.6%, 대장금 테마파크 6%, 남이섬 5.3% 등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전남은 각각 1.5%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순수 관광 목적으로 민속촌, 남이섬 등 특정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 비율이 광주·전남을 찾은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연도별로도 인천·부산 등이 1~5% 가량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은 지난 2005년부터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계기로 지역사회 전체가 관광 인프라 조성과 대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광주·전남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 지역 관광 전문가들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서·남해안에 대표 관광상품이 없고 ▲특급호텔·국제선 항공편 등 관광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은 지난해 11월 무안 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에도 국제항공편이 주 10개 노선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4개 노선은 중국에 편중돼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목을 국제 규모의 특급호텔도 태부족한 실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망직업·성명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 막가는 일본

### 문부성 “내년부터 독도 교육 강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중학교 신 학습지도 요령 사회과 해설서가 적용되는 4년 후를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독도에 대한 영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공영 NHK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상 가능한 한 빨리 어린이들에게 독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신 학습

지도요령이 시행되는 201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앞당겨 독도에 관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 지역에서 개최될 학습지도

요령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방송은 밝혔다.  
현재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전체 14개 중 4개에 불과하지만 이번 해설서에 기술됨에 따라 4년 후에는 거의 모든 교과서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다룰 것으로 문부과학성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연협뉴스

## “진상 조사단 수용·자료 제출하라”

### 정부 ‘금강산 피살’ 국제 공조 검토

정부는 15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한 것은 명백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수용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북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수신을 거부함에 따라 전통문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전통문은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 제10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통문은 이어 “생방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을 민간에게 맡겨 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우리 측은 황부 통일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금강산 현지에 파견하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합동 조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남북 당국이 동

수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통문은 “이와 관련해 북측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는 남북간 제1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란 박씨 사망 장소 근처에 설치된 CCTV 테이프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조사단 방북 거부 등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중국, 일본 등과 공조할 수 있는지는 질문에 “국제 공조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협뉴스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10215300-93118